

‘수사 선상’ 광주·전남 지자체장 추석 전후 판가름 전망

강진·장흥군수 공직 선거법 위반 송치 보성·영광·담양군수 막바지 수사 단계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에 앞서 민선 8기 지자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기소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올 추석 전후 송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수사2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유권자 10여 명에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을 받고 있

다. 강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 장흥군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경선 과정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수 개월 간 수사 중이다. 범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보성군 모 사업소 공무원 2명이 재선에 도전하는 김 군수의 경선 과정에 부적절한 관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막바

지 수사 중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출마 예정자로서 지역 단체 행사에 참석, 선거구민 4명에 130여만 원 상당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추석 연휴 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에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

으로 전해졌다.

각종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자체장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청 반부패수사1대는 이상의 함평군수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하수관로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5벌)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현재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군수의 아내는 지역 내 생태공원 조성 과정에 관련 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 아내는 경찰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관련자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 비위 수사 과정에서 김산 무안군수 측근의

연루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난 5월 특정 업체와 8억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는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뇌물 관련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 납품업자 1명, 뇌물을 건넨 브로커 1명 등 5명을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로 받은 금전이 김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이 확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성범죄에 연루, 형사 입건된 김 이강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 역시 늦어지고 오는 10월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호기자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 30일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중앙아파트 입구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대한적십자 봉사자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송편을 만들고 있다.

아파트 밖으로 고양이 던진 40대...1심 벌금 300만원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5시간 만에 아파트에서 추락시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4일 오후 7시께 약 5시간 전에 분양받은 고양이를 아파트 복도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죽은 고양이를 구경하던 B군이 '고양이 던진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때린 혐의

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고양이가 지면에 추락한 지점이 실적으로 인해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보다 훨씬 멀다"며 "A씨가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코로나 먹는치료제 투여율 23.6% 전주대비 2.8%p 상승...전남 높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주간 투여율이 일주일 사이 증가해 23.6%로 나타났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21~27일 각 시도별 60세 이상 고령층의 먹는 치료제 투여자는 4만3005명으로 확진자 대비 투여율은 23.6%다. 이는 일주일 전 20.8%에 비해 2.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각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7.8%로 투여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27.6%, 강원 26.4%, 대전 26.3%, 부산 26%, 대구와 충북 각각 25% 등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수도권인 서울은 22.4%, 경기도는 24.7%의 투여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은 13.4%로 투여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 18.1%, 경북 18.4% 등 20%를 밑돌았다.

방대본은 "의료기관에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적극 고려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서는 중증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 치료제 처방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CCTV 없는 목욕탕 탈의실 옷장 턴 30대 구속

폐쇄회로(CC)TV 감시 카메라가 없는 목욕탕 탈의실을 돌며 금품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동 목욕시설 내 탈의실 옷장을 공구로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여수시 목욕탕 남성 탈의실 7곳에서 10차례에 걸쳐 옷장을 공구로 부수 금품 5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CCTV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를 틈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고자 누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탕 탈의실 절도가 잇따라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 탐문·잠복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등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귀중품을 잠금 장치가 취약한 옷장에 보관하면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여수=기획재정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